

칼럼

건설공제조합의 딜레마

정 완 대 |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지난 9월 극동건설이 지주회사 응진홀딩스와 함께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다. 이미 풍림산업, 벽산건설, 삼환기업, 남광토건 등 중견 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줄을 잇고 있었지만 재계 서열 30위권인 응진그룹의 위기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건설업의 위기가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가 침체를 벗어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주택 경기의 동반 하향세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침체로 건설업 환경은 마치 긴 터널 속에 들어온 듯하다. 그러나 경기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순환 과정이다. 경기 침체가 마무리되는 어느 시점에는 텐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건설공제조합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다. 흔히 말하듯 비가 올 때 조합원의 우산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이나, 자칫 과도한 신용 공여로 인해 공멸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위험도 함께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해볼 수 있다.

첫째, 공제조합은 보증을 통해 신용을 창조하고 있는데, 조합원의 신용 확장성을 간접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과도하게 창출된 신용은 기업의 부실로 귀결 될 가능성을 증대시키므로 조합은 리스크 허용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건설산업의 적정 신용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조합은 이미 2007년부터 리스크관리팀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최근 조합 감

독 기준 제정에 따라 리스크 관리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둘째, 공제조합은 신용평가제도와 Watch제도를 통해 개별 리스크를 사전 관리하고 있다. Watch제도는 신용 등급의 적시성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사전 예방 관리상 필요 한 경우 Watch 조합원으로 지정하여 적시에 거래 조건을 변경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이상 징후를 조기 포착해 부실 채권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개별 조합원의 무리한 사업 확대를 제어하도록 유도하는 간접적인 통제 시스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별개로 운영되고 있던 신용평가제도와 Watch제도의 일부 기능을 통합해 Watch 지정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등급 감시 기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건설 금융 여건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례로 국민총소득 대비 국내와 해외 건설 수주의 점유율은 각각 8.9%와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해외건설 수주는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은 TFT를 구성해 해외 보증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해외 보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업의 보증난을 해소하고 조합원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내와 환경이 다른 해외 보증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 지금 과감히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때이다. CERIK